

여형범 (충남발전연구원)

▪ 발표문은 국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으로 '지역불균형'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한다.

- '지역불균형'은 전력자급률('전력소비량/전력생산량') 지표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적 피해와 생산된 전력을 멀리 떨어진 대규모 수요처로 공급하는 고압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등의 지자체는 발전소 및 고압송전망 건설·운영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감안하여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감면하는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논리로 이미 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송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 발표자들은 이런 주장의 설득력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보상 논리'에 빠져 에너지 전환 가능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 가령 충남은 전력소비에 비해 전력생산 비중이 250%를 넘어서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전력 다소비 산업이 입지하면서 전력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전력가격의 지역별 차등제로 인한 전력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충남의 전력소비를 더욱 높일 수도 있다.

▪ 발표자들은 전력체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전국화와 사유화(또는 미약한 공유화)로 인해 발생/심화되었기 때문에 재지역화 또는 재공유화를 통해 풀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체계가 지역화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수요관리나 에너지복지 등의 정책을 통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에너지 정책 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다. 전환마을 운동, 독일의 '100%재생가능에너지 지역' 프로젝트, 영국의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등을 이런 재지역화의 사례로 소개한다.

- 또한 이러한 에너지 재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된 에너지 시설망을 재공영화하거나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지역에너지공사는 에너지생산으로 인한 편익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고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 지역에너지 총량제에 기초한 지역재생에너지자립도('지역재생에너지 생산량/지역최종에너지 소비량') 지표는 에너지 전환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발표문에서는 에너지 전환 담론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 국내에서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법을 개정하고 한전의 독점구조, 전기요금체계, 에너지교통환경세 등을 개편하여 에너지 권한을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법이나 제도들이 어떤 담론으로 뒷받침되었는가?

- 기존 에너지 전환 담론은 재지역화나 재공유화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 현재 에너지체계를 뒷받침하는 담론, 기존 에너지 전환 담론, 새로운 에너지 전환 담론을 비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나 효과에 대한 상상력이 더 필요할 듯하다. 발표문은 에너지 부문 내의 정책통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더 폭넓은 부문의 정책통합을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가령 일본에서 숲 복원 활동을 재연료화(refueling)과 연계시키자는 제안을 예로 들 수 있다(Terada et al. 2010). 일본에서 1950년대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숲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숲이 지나치게 울창해져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었다. 1990년대 이후 버려진 숲을 잘 관리하여 공원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벌채를 도입하여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덧붙여 교육, 오락, 예술활동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된다.

- 발표문에서 소개하는 전환마을 운동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업, 식품, 건축, 교통 등 다양한 부문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 국내에서도 통영 연대도, 산청 민들레공동체, 임실 중금마을 등의 사례는 에너지전환이 마을만들기 활동과 결합되고 있다.

-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길들여져 희미해지거나 없어진 관계망을 어떻게 복원하거나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함께 필요하다.

▪ 발표문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지역화와 재공유화 담론에 기초한 지역 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듯하다.

- 피해 보상이 발전소나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편익이 발생한다. 피해 보상 성격의 돈을 지역에너지공사에 투입하는 것에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겠는가? (가령, 지역자원시설세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에너지공사가 지역에너지 특성이 매우 상이한 사군, 읍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전환(재지역화와 재공유화)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지역에너지공사는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복지 등 보호된 시장(nested market)에서 작동하는가 아니면 한전자회사나 민간발전업자 등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작동하는가? 보호된 시장에서 작동한다면 어떻게 지역에너지공사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가?

- 지역에너지공사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